

금남로에서

정재현



교육현장이 변화의 몸살을 앓고 있다. 무상급식과 일제고사 폐지, 학생 인권선언, 체벌금지 등 숱한 논란을 둘러싸고 갑론을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치권과 지자체까지 가세하면서 진보·보수의 이념논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런 변화는 진보 교육감의 탄생에서 이미 예고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6명이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이 가운데 2명은 전교조 출신이다. 이는 교육계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예상조차 할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그동안 보수와 관료 중심 일색이었던 교육계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추세가 된 셈이다.

변화의 홍역 앓는 교육계

국민은 변화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교육계를 기대와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광주·전남 지역민은 더더욱 그렇다. 두 교육감 모두 진보성향인데다, 특히 광주는 전교조와 동고동락(同苦同樂)한 교사 출신이기 때문이다.

지역 교육계는 예상대로 울 들어 변화

의 바람이 거세다. 조직개편에서 인사, 교육정책에 이르기까지 틀을 바꾸는 작업이 한창이다. 두 교육감은 지난 지방선거 때 변화와 혁신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고, 지역민들은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은 당연하다.

광주·전남 교육감이 지역민과 학부모

3월 교원인사가 기다려진다

들에게 내놓을 첫 작품은 이달 말께 있을 정기교원인사가 될 것이다. 그동안 교원인사는 급품수수, 정실인사 등 교육풍토를 어지럽히는 근본원인이었다. 지역 교육계의 고질병인 과별과 부정부패, 무사안일, 공교육 황폐화 등이 인사에서 비롯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월 정기인사를 진보교육의 성패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보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하지만, 지역 교육계는 기대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 광주·전남 교육청은 인사를 앞두고 최근 조직을 개편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조직쇄신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교육감의 친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그리고 특정단체 출신의 인사를 앉히기 위한 조직개편은 곤란하다. 더욱이 공조직을 무력화시키는 위인설관(爲人設官)은 개혁이 아닌 개혁(改惡)이다.

그럼에도 시·도교육청은 원권과 권력 집중에 따른 공조직 무력화가 우려되는 정책기획담당관이란 자리를 신설했다. 또한 시교육청은 일선 교육장에 위임했던 하위직 전보권을 전격 박탈하는 조예안을 제정 중이다. 자칫 교육자치의 근간을 해칠 수 있는 이 같은 조직개편이 정기교원인사에 어떻게 반영될지 지켜볼 일이다.

개혁과 혁신은 국민의 공감대를 전제할

와 토론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는 세계적인 교육강국이 '교육 유투피'로 불리는 핀란드는 교육개혁에만 22년이 걸렸다. 핀란드 교육개혁의 성공은 교육을 국적으로 보고 초당파적인 합의를 이뤄내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교원인사 진보 첫 시험대

과거의 것을 전부 백안시하는 것은 독선이다. 재임기간에 모든 것을 바꾸어 놓겠다는 것 역시 망상이다. 교육은 신중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념과 계층을 아울러야 하는 이유다.

광주·전남교육감은 교육개혁에 대한 의욕에 넘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조급해선 실패한다. 개혁을 하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과의 소통을 원활히 하면 개혁의 길은 보인다. 복지국가의 원칙과 교육자로서의 철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사회 전반의 공감과 협력을 이끌어 내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하다.

장래 교육감과 장만대 교육감에 거는 기대가 크다. 천직으로 삼은 교직까지 박탈당하면서도 교육자의 길을 곳곳이 지켜 단 선생으로서, 일생을 교육자 양심과 한국교육의 질적 향상에 바친 진보 교육화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그래서 이번 정기교원인사가 더욱 기다려진다. <논설실장> jhjung@kwangju.co.kr

시 설

울 지역 건설경기 최악 전망, 대책 서둘러야

올해 광주·전남지역 건설경기가 최악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공기관의 지역 내 발주공사 규모가 지난해에 비해 3분의 1 이상이 줄었기 때문이다.

광주일보가 분석한 올해 조달청의 광주·전남지역 주요 시설공사 발주 규모는 1조4060억 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2조2000억 원에 비해 7940억 원(36.1%)이 감소한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공사의 감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공사의 감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공사의 감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신규공사의 감소다.

건설사들이 지역의 큰 공사를 독식해 지역 중견건설업체들마저 줄줄이 부도를 맞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워주는 비상구 역할을 해 온 공공 공사마저 급감한다면 실재가 없게 된다.

건설경기가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연관산업의 파급효과도 크다. 특히 일자리 등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따라서 현재 지역경제가 처한 어려움과 서민들의 팍팍한 살림살이를 건설행사의 장기침체와 무관치 않다.

정부는 한계 상황에 있는 지역 건설업체의 현실을 감안해 신규 공공 공사를 대폭 늘리는 한편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폭 확대와 같은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지자체도 건설사업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등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다. 지역경제의 한 축인 건설산업이 붕괴되는 일만은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

도의회 '관광성 외유' 해도 너무하지 않나

전남도의회 일부 의원들이 임시회 회기 중인데도 불구하고, 피감기관 직원들과 함께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서 도덕적 해이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원회 소속 임흥빈(신안 1·민주)·곽영채(강진 1·무소속) 의원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박철홍(담양 1·민주) 의원 등이 14일부터 8박 9일간의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연수를 떠났다고 한다.

이번 연수는 '진학지도 유교문화 해외연수'라는 이름으로 교육청 직원들이 동행했고 현지 교육현장 등을 둘러본다는 계획이다. 특히 박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정돼 있음에도 개인 사비를 들여 해외연수에 동참했다고 하니 자질이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교육청 견제의 주체가 되어야 할 교육의원들이 교육청 지원 아래 해외 외유를 떠난 것이다.

이번 해외연수는 회기 중에 의정활동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외유성' 여행이라는 점에서 호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연수 일정을 보더라도 야생동물원, 호주국립공원, 시드니 타워·크루즈 탑승을 통한 남태평양 야생동물관람, 오페라하우스 및 시드니아쿠리움 방문, 플라네시안 온천 등 대부분 관광으로 채워져 있다.

더욱이 의원들이 지난해 학교 설립에 대한 사전 설립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결시켰던 '도립학교 설립 동의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직후 연수가 이뤄져 '대가성'의 의혹마저 일고 있는 것이다.

이제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외유는 뿌리깊은 병폐로서, 더 이상 양심과 상식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지자체에서 예산을 팔 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비 항목을 없애는 등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관리를 통한 관광성 외유가 밝혀지면 주민들이 해당의원에 대한 소환 등을 통해 지방정치 무대에서 퇴출시켜야 할 문헌이다. 언제까지 지역민의 혈세를 이런 식으로 낭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목영석



옛그제 새해를 맞은 것 같은데 내일이면 보름이다. 예전 같으면 부럼에 귀밝이 술을 준비하며 흥겨워할 때이지만 구제역이 퍼져 나가면서 세시풍속마저 바뀌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축시장이 폐쇄되고 5일장이 문을 닫았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 가족과 친지를 방문하며 게를치하게 하더니 대보름맞이 행사들도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구제역이 휩쓸고 있는 경성, 충청, 경기도뿐 아니라 제주 들불축세, 광주 고싸움놀이 등도 취소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를 위협하고 있다. 정육점을 비롯한 도소매업이나 해당지역의 음

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면 표정이 달라질까? 구제역과 AI의 폐해는 소고기와 닭고기 가격의 인상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돼지와 오리 가 먹는 사료, 가축분뇨를 활용한 비료업, 볏짚, 왕겨, 톱밥가래가 끊기고, 항생제, 영양제 등의 동물약품, 살코기 등을 가공하는 업체가 2차적으로 타격을 받고 급창·순댓국집이 개점휴업에 이른다. 학교에서는 유유급식이 어려워지고 원유를 가공해야만 하는 버터와 각종 유제품, 제과·제빵업, 관련 유통업도 피해를 면키 어렵다.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지 침출수

보름달에 빌어야 할 소원 하나

식육산업이 위축되고 여행업이 직격탄을 맞으니 서비스업 생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공동체의식이 희미해지면서 사람들은 이기적이 되어간다. 자신은 소를 키우지도 않고 부모가 시골에 살지도 않으며 축제에서 턱볼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는 이도 있다. 흥겨운 주말 나들이 길. 구제역방역 초소 앞에서 소독제를 뿌리면 밀정찬 차에 무슨 것이냐며 욕을 해대는 사람도 있었다.

순간적인 짜증을 못 잊어 한 말이겠지만 누군들 명절을 가족과 보내고 싶지 않고, 엄동설한을 길 위에서 보내고 싶어하는 이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어쩌면 그들은 외신이 전하는 이집트 시위 정도로 자신과는 무관한 일이라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자신들이 내는 세금이 구제역 방제에 얼마가 쓰여지고, 퇴근 길 소주 안주로 삼는 삼겹살이 시너브로 수입산

가 유출되고 처리불능 상태에 빠진 가축 분뇨가 버려져 수돗물마저 마시지 못하게 되어야만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을까? 우리는 이미 종사하는 직업이 다르고 주거지역이 떨어져 있더라도 원하던 원치 않던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역만리 이집트의 정변이 별 상관없어 보이는 우리 증권가를 술렁이게 하듯 작금의 구제역 파동은 실질소득의 하락을 부르고 가계경제를 불안케 하는 내발등의 불이 되어 있는 것이다.

밀리는 차 행렬은 몇 분 후면 롤리고 분사되는 소독약은 차체를 부식시키지도 않는다.

보름달을 보며 자신의 건강과 가족의 안녕만을 기원할 게 아니라, 힘써여하는 농업인과 방역종사자들을 순간이나마 위로하고, 구제역과 AI진식을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경건히 기도할 일이다. <농협중앙회 차장·'05년 수상자>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전승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란 속담이 있다. 이는 주소나 이름도 모르면서 집을 찾는 일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이다. 서울이나 낮은 지역에 갔을 때 목적지를 찾지못해 헤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겐 아주 익숙한 속담이다.

요즘에는 스카이프·로또 등 인터넷의 웹 지도,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어 목적지 찾기가 예전에 비해 수월해졌지만 아직도 목적지에 도착해 보면 인근에서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주소 체계가 잘못되어 돌아돌아 찾는 경우도 있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로 보편화된 주소 제도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목적지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20m간격으로 기초 번호를 붙여 거리 계산이 가능한 등 여러 나라의 주소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특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소방·범죄·구급·구조 등 긴급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택배 등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작년까지 시

'도로명 주소'가 지역발전 이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소 하나만으로도 전국 어디나 찾아 갈 수 있고, 택배 및 우편 등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배달되어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 바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이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는 1910년 한·일 합방 후 일제가 근대화된 토지제도를 수립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대장을 근거로 토지수탈 및 조세징수 목적으로 만든 지번방식으로 100여년간 사용해 왔다.

하지만 급격한 경제발전과 인구집중으로 인해 다양하고 불규칙한 토지이용이 빈번하고 지번 상호간 연계성이 없어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997년으로부터 시작해 2007년 4월 도로명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도로명주소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도로명 주소는 OECD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국제적으

로 보편화된 주소 제도로, 도로에는 도로명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목적지의 예측이 가능하도록 20m간격으로 기초 번호를 붙여 거리 계산이 가능한 등 여러 나라의 주소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이다.

특히 도로명 주소가 도입되면 소방·범죄·구급·구조 등 긴급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택배 등 물류비를 절감하게 되어 국가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 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남도에서는 작년까지 시

대중교통 기사들 운전중 목설 자제했으면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보면 기분이 좋지 않을 때가 많다. 도로가 막히거나, 옆에 차량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버스나 택시 기사들의 입에서 거친 욕설이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도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택시가 끼어들자 버스기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거친 욕을 쏟아냈기 시작했다. 아이들을 데리고 탔는데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렸는지 모르겠다.

운전을 하다 보면 도로에서는 끼어들기나

차선 바꾸기, 급제동 등 여러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한다. 승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이다. 고객에게 친절하기는커녕 운전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로 욕설을 퍼부어 대는 것은 시민들에게 대중교통에 대한 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대중교통 기사들의 언행에 따라 수많은 시민들의 하루 기분이 달라질 수 있다. 또 그것에 의해 우리 대한민국의 하루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사들이 명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만석·광주시 광산구 서봉동

無等鼓

매년 엄청난 수의 회화작품이 구매자를 찾아 시장으로 흘러나오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그림이 잘 팔리는지'에 대한 보편적인 평가 또는 원칙이 존재한다고 한다.

현대미술품 컬렉터이자 작가와 미술 평론가, 화랑, 경매회사들 간의 관계를 파고든 책 '은밀한 갤러리의 저자'의 저자이기도 한 도널드 톰슨(Donald Thompson)에 따르면 초상화의 경우 나이 든 여성이나 추한 남성보다는 매력적인 젊은 여성 혹은 남자 어린이의 초상화가 더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색깔도 빨간색, 흰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의 순서로 잘 팔린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앤디 워홀의 작품은 초록색이 비싼데, 초록색이 '달라'의 색깔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색이라도 흐린 쪽보다는 밝은 쪽 그림의 값이 더 나가고, 세로 캔버스보다는 가로 캔버스가 더 인기가 높다. 웃을 많이 입은 그림보다는 누드 그림이, 남성보다는 여성 누드가 더 잘 팔린

다. 과일보다는 꽃 그림이 더 비싸고, 잔잔한 물이 들어간 그림이 거친 물결이 있는 그림보다 더 비싸게 팔린다. 거친 물결에 부러진 배까지 들어가면 값은 더 떨어진다.

동물 그림은 잡종개보다는 순종 개가 더 비싸고, 짐 마차를 끄는 말보다는 경주마 그림이 더 비싸다. 새 그림은 사냥 장면이 들어간 것이 더 비싸며, 새의 수가 많을수록 값이 올라간다. 마지막으로, 외설행위가 담긴 작품은 잘 팔리지 않는다.

서양회화를 기준으로 한 분석이긴 하지만, 한국에서도 대체로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 흥미롭다. 새해를 맞아 지역에서도 많은 전시회와 경매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이곳 광주·전남에서도 잘 팔리는 그림을 많이 찾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한 작가의 평생이 담긴 그림을 단순히 얼마나 잘 팔리느냐로 재단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지만, 팔리지 않는 그림처럼 허무한 것도 드물기 때문이다. /홍행기 정경부차장 redplane@



팔리지 않는 그림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이메일 opinion@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알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대표 FAX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광고매체국	227-9600	(F A X 222-0195)	
편집 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경부	2200-612	사 진 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7	디자인	2200-555	(F A X 02-773-9331)	
대표 FAX	2200-616	조 사 부	2200-57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전 산 부	2200-68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